



독일 제조업 사업장규모별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설문조사 발표

독일의 50~4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제위기 이후 관리가 소홀해진 것으로 나타남.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

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 설문조사

- 해당 설문조사는 BKK BV, DGUV, AOK-BV 등 독일의 주요 산재보험협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되었음.
-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가 처방적 규제(prescriptive regulation)에서 자율적(self-regulatory) 규제로 변화하고 있음.
- 독일의 경우 건강보험회사와 산재보험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여할 의무를 지님.
- 외부 감독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사제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임. 그 대신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과 산재보
험에 대한 자체적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갖추도록 장려함.
- 과거의 유사 연구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관여도가 각 산업영역별로 매우 상이했으며, 가장 큰 관심
을 받아온 업종은 제조업임.

설문조사 대상

- 조사대상은 50~499인 제조업 사업장. 제조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
으로 나타남

결과 : 사업장 규모별 산업안전보건 관리현황

-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 경우가 높음.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사업장의 1/3(36%)만이 산업안
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남
- 직장평의회(works council)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
- ※ 직장평의회 : 사업장 내에서 산별 단체협약의 이행여부를 감시감독하고 노동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고충을 대변함
- 산업안전보건권이 이행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 : 바쁜 일상 업무(84%), 자원 부족(74%), 관심부족 등
- 경제위기의 영향: 최근의 경제위기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조사대상 사업장 중 9%는
경제 위기 이후에 오히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함

결과 :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사항

- 선진사례에 대한 연구-(55%)
- 세금공제 혜택-(52%)
- 산재보험사, 의료보험사로부터의 혜택-(48%)
- 전화상담서비스-(42%)
- 기타 : 역내 네트워크, 고용주배상책임협회로부터의 개별적 지원,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용적 지원, 미디어 정보 등

결론

-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제조업에서조차 미비한 부분이 많이 발견됨
-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외부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